

5. 조건부승인 은행의 정상화 방안

- (정책 방향) 금감위는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을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 이들 은행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, 특히 은행간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
- (주요 내용) 이행 계획서 보완조치에 대한 평가가 8월말 실시될 예정이며, 정부 지원은 합병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임
- (문제점) ▷합병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경영 개입도 일관성을 잃고 있음
▷여타 은행들은 합병 실익에 대한 확신감이 불충분
- (정책적 보완 과제) 정부는 ▷초대형 은행의 수익기반이 보장되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▷단기적으로는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병을 유도하고 ▷은행권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부실채권전담기구의 확충과 자산유동화의 활성화가 시급함

□ 정부의 2차 은행 구조조정 방향

- 금감위는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을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 이들 은행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, 특히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
 -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의 은행장 선임과 이행계획서 승인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, 이행계획서의 보완 조치에 대한 평가는 8월말에 이루어질 예정임
 - 금감위는 조건부승인 은행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, 인력과 조직감축 등 강력한 회생방안을 요구하였음. 단 합병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방침임
- 상업·한일은행의 합병 실무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음
 - 금감위는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 지원과 함께 주주로서 경영 정상화 작업에 직접 개입하기로 하였고, 정부는 합병은행의 부실 자산을 성업공사에 인수시킬 예정
 - 그런데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채권 공급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, 합병은행이 필요 자금조달을 위해 이 채권을 저가로 매각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산 매각손이 우려되고 있음

□ 은행권의 경영 정상화 추진 현황

- 경영 정상화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입장에 있는 조건부승인 은행들은 우선 합병을 적극 검토하면서 외자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
 - 조건부승인 은행의 경영정상화 보완 조치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8월말경 추가

- 합병의 발표 가능성이 있으나, 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
- 합병에 실패한 은행의 경우 외자유치나 자체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
- 우량 은행들은 자산 건전화와 대형화를 위해 합병과 외자유치 방식을 모두 고려하되, 우선 외자유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조건부승인 및 우량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추진현황 >

은행	추진 현황
상업·한일은행	-8월11일 합병추진위원회 출범 -9월30일 합병승인 임시 주총, 99년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 예정
조흥은행	-외자유치와 합병 병행(보람/신한/주택은행 중) 추진
외환은행	-합병 추진 공식화(한미/국민은행 대상), 한외종금과 통합
하나+보람은행	-兩은행간 합병 비율, 인력 감축 등의 쟁점을 논의중이며, 하나은행의 최종안에 대해 보람은행이 입장을 통보할 예정 -합병후 미국, 유럽계 은행으로부터의 외자 유치나 전략적 제휴 추진
장기신용은행	-IFC의 추가 투자와 함께 소매금융 특화 유럽계 은행을 대상으로 합작을 모색(3억 달러 유치)
국민은행	-미국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부터 6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
주택은행	-미국계·유럽계 은행들과 복합적인 전략적 제휴 추진(3억 달러 유치) -정부지분(16.11%)을 합작선에 매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

□ 문제점

- 실익이 불분명한 합병 추진은 구조조정 비용 감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
 - 6월말 현재 요주의이하 여신이 한일 8조 9,130억 원, 상업 5조 9,222억 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각각 4조 1천억 원, 1조 원 증가함으로써 정리 비용이 늘어남
 - 조건부승인 은행의 부실경영 문책과 신임행장 선출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불투명한 개입이 계속되어 자율적 경영개선 노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
 -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 합병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외 신용한도(credit line) 하락 효과가 커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더 줄어들 것임
- 합병 주체가 될 수 있는 대부분 은행들은 오히려 합병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임
 - 국민은행은 38.9%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과 부실 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동반 부실화,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에 따라,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~6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통한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
 - 신한은행이나 장기신용은행도 합병의 적극 추진보다는 외자유치 등을 통한 증자 노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- 하나 및 보람은행간 합병도 양 은행간 異見이 커 단기간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< 합병형태에 따른 효과 비교 >

합병 형태	합병에 따른 득과 실
대형 시중은행간	긍정: 기업문화, 영업방식 및 부실정도의 유사로 합병 용이(규모의 경제) 부정: 점포 중복에 따른 점포 조정비용발생, 인화의 어려움
대형 시중은행 + 중소 신설은행	긍정: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결합한 범위의 경제, 자본충실화에 기여 부정: 규모의 경제성 미약
신설은행간	긍정: 효율성 있는 은행간 합병으로 미래의 부실화 방지 부정: 규모의 경제성 미약
지방은행간	긍정: 영업권역 확대에 따른 지역적 영역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부정: 지역정서 차이에 의한 조직융합의 어려움
-특수은행간	긍정: 유사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 효율화 기대
-지방과 신설은행	부정: 목표의 불명료, 조직문화 차이

자료: 한국경제신문(98.8.3)

□ 정책적 보완 과제

- 정부주도의 은행 대형화 추진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초대형 은행의 수익 기반이 보장되는 토양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
 - 세계 1위의 자산규모(6,534억 달러)를 갖춘 도쿄-미쓰비시은행은 일본의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549%나 감소하는 실정임
 - 일본의 경우 금융산업의 낙후성과 경제침체가 겹쳐 은행 대형화의 실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
- 은행 합병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초대형 은행은 3~4개 국내은행의 합병을 통해서만 가능. 우선 은행의 건전화 차원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차후에 대형화를 위한 합병이 바람직할 것임
 - 대형화의 실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, 은행 합병에 따른 조정 비용은 단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함
-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가 현재 은행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임
 -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구축과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통해 실물 경제 기반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

(임진국 jklim@hri.co.kr ☎724-4018)